

친환경농업활성화와 로컬푸드 운동의 연계



김 병 혁 사무국장

대구경북 농업희생과 지역자치를 위한 사회연대

2005년 11월에 있었던 밥상용 쌀의 의무수입을 규정한 쌀 협상안의 국회통과, 그 뒤 연이어 진행되어온 한미 FTA의 추진은 안 그래도 어려움에 처해있던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더욱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농업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진행되어온 한국의 농업을 둘러싼 여러 대내외 정책들은 비단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려온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대외의존을 심화시키는 성장방식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경제성장중심의 패턴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성장이 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돈 안되는 분야 - 예를 들어 농업과 농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겠는가?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은 결국 극심한 경쟁을 국경 없이 구조화하는 체제다. 그러므로 가장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농민, 노동자를 포함한 경쟁력이 없는 약자 일수 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서로 피나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삶의 근본을 성찰하고, 사회적 약자와 자연환경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농업의 전면적 몰락이다.

아마도 이제 성공적인 산업국가의 하나로서, 지금의 우리사회는 농촌과 농민의 운명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흔히들 더 많은 무역과 더 높은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사는 이대로 포기하고, 식량은 수입해서 사다먹으면 된다는 논리가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식량수입에 필요한 돈을 벌어들여 줄 지금과 같은 성장과 무역체계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한들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식량이 늘 해외에 준비되어 있다고 결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세계적인 경지면적의 감소,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의 요인으로 국제적인 식량사정이 갈수록 악

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의 식량자급률은 25%수준에 머물러 있고 쌀을 빼다면 5%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밥상은 외국의 다국적 식량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의 밥상을 전적으로 수입식량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을 다른 이들의 손아귀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농업이 붕괴된 후 세계적인 식량위기사태가 터진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이제라도 농업과 농촌공동체를 되살리려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땅에 뿌리박은 지혜로써 수천 년의 세월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온 풀뿌리 민중 자신의 인간다운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풍요'를 구가해온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 역시 더는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1.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한계

이러한 한국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친환경농업 육성이었다. 친환경농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육성되고 권장되어야 할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그 목적을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을 고민한다면 지금과 같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기초한 농업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땅을 보호하고 농촌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농산물을 통한 도시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더구나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은 그 자체로 화학농업을 대체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들 알고 있듯이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육성되어 온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몇몇 뜻있는 유기농업 선구자들과 한살림을 비롯한 몇몇 생활협동조합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어오던 유기농업 운동이 제도 안으로 수용이 된 것은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였다.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유기농업 내지 친환경농업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된 것이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70, 80년대 개인적 신념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활동가들이 식량증산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온분자로 찍혀 경찰서에 들락날락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친환경농업을 확대, 육성하기 위한 농림부의 정책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그동안 사회적인 무관심속에서 꾸준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왔던 선구자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의 소비자들이 농업인과 함께 더불어 진행해왔던 생활협동조합의 노력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환경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값싼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 대응전

략 역시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육성되어온 국내의 친환경농업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6년 말 기준 실천농가수, 인증면적, 인증량 모두 매년 78~82%의 급증세를 이루어오며 새로운 농가소득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로 미미한 실정이며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인증이 60% 정도이며 유기농산물의 비율은 12%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몇 년 전부터는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취약한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하고는 싶으나 판로의 문제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농민들을 많이 만나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요하게는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소비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국민소득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친환경농업이 발전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즉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통, 소비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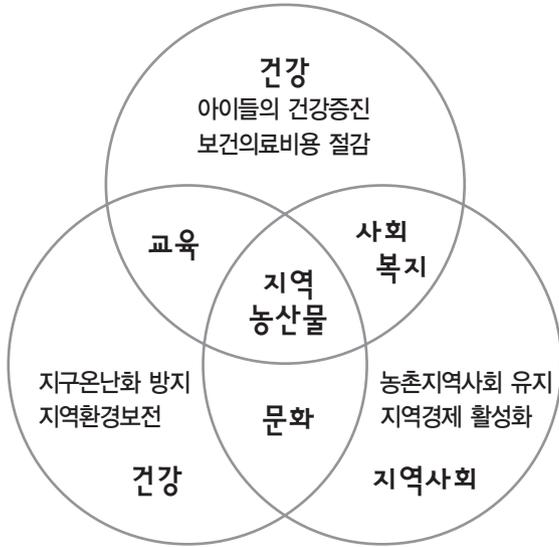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에는 '신뢰'라는 사회적인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농산물보다 비싼 값을 치루고 구입하는데 진짜 친환경농산물인지 의심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기꺼이

비싼 값을 치루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겠는가. 식품시장에 대한 불신이 깊은 한국의 상황에서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 가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소비가 수용하지 못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남아 농가가 애를 먹는 상황이 계속 반복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친환경농산물 역시 국제교역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친환경농산물 수입이 2003년에 비해 2005년에 9.4배 정도로 늘어 난데서 보듯이 친환경농산물 수입량이 매년 큰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수요 확대가 곧 국내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수입 친환경농산물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지역살림먹거리(local food)운동

이러한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역살림먹거리(local food) 운동이다.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이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다. 즉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지 말고 지역단위에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통합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의 농민과 소비자, 농촌과 도시지역 상호간의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농산물 시장개방에 맞서는 방어막을 치자는 것이다.



지역농산물직거래의 다면적 가치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동 거리(food mile)가 짧다는 것이다. 먹거리는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르는 거리가 그 상품의 질을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통기간도 길어지고 그에 따라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한 각종 처리공정들이 먹거리의 질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 예를 들면 장거리 수송에 따르는 이산화탄소 배출 - 을 지불하게 된다.

두 번째는 먹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지만 또한 사회적인 거리 역시 가까울수록 좋다. 가능한 한 직거래 형식이 제일 좋을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일지라도 몇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와 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유통에 필요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

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철저히 분리시킨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지역단위로 생산과 소비를 조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지역농산물직거래는 건강한 먹거리, 지역 환경 보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동적 사회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순환형 사회 및 지역 공동체의 강화에 도움을 주게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기존의 친환경농업 영역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유기농’ 또는 ‘친환경’이라는 딱지는 다국적 식량기업들도 붙일 수 있지만, ‘지역 먹거리’라는 딱지는 오직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에만 붙여진다는 것이다.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라는 강력한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즉 ‘지역 먹거리’라는 의제 자체가 이미 반세계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이 가능성은 작년에 대구에서 진행했던 농민장터 및 지역농산물직거래 운동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작년에 대구에서 진행한 농민장터 - ‘대구경북 농업희생과 지역자치를 위한 사회연대’와 ‘대구문화방송’이 공동주관하고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7월 21일에 시작해 10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고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을 생산한 농가가 직접 나와서 판매했다. - 에서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우리도 농업 중요한 거 알고 있다. 나도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고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지키고 싶다. 그런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국산농산물을 애용하라고 그러는데 비싸게 국산농산물을 사면 속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안속아도 옆의 사람이 속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국산 농산물 사기가 꺼려진다. 왜 비싸게 사고 속나, 그냥 수입농산물 싸게 사는 게 속편하지. 농협이야기 하는데 오랜지 파는 농협을 어떻게 믿나. 내가 농민장터에 온 것은 농민들이 직접왔다고 해서 더운데도 나와 봤다. 직접 농사지은 사람들 얼굴을 보니 더 신뢰가 간다. 지금처럼 우리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농민장터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주된 반응이라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지역 단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농산물직거래의 가능성을 일부분이나마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의 영역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의 영역은 다양하다. 그 중 중요한 영역은 학교급식, 사업장급식, 공공급식, 병원급식 등의 사회적 수요를 지역농산물직거래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학교급식영역이다. ‘농민에게 희망을 아이들에 건강을’이라는 모토로 많은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자재를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3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전 학교에 친환경

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나주, 제주 등에서는 지자체가 밭 벗고 나서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자재를 친환경농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의 친환경농산물과 연계한 학교급식은 농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000년 정부와 몇몇 광역지자체들이 기초 지자체들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재료를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현재 이탈리아 어린이의 1/4, 그리고 500개 이상의 지자체 산하 학교들에서 유기농 급식을 공급받고 있으며, 수백여 곳의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 먹거리를 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북부의 에밀리아 - 로마냐 주에서는 35만 명의 학생 전체가 2005년까지는 모두 유기농 급식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육류와 가공식품은 적게 먹는 지중해식 전통식단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학교들에서는 영양, 요리, 먹거리 선별법 등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농장 체험’을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4년 현재, 학교급식과 지역 농민들을 연결시켜주는 ‘farm to 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이 22개 주 400개 학교에서 시행중에 있다. 또한 동부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들은 지역 농산물만을 사용하는 학교 식당을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탈리아의 학교급식을 모델로 삼고 이를 배워 와서, 현재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이들 나라들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단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급식 역시 학교급식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다. 농민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지역농산물을 직거래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사업장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역농산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사 1촌 자매결연 맺기 같은 형식적인 방식의 사업이 아니라 사업장의 노동자와 농민이 직접적인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일상적인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광주 기아차노조가 구례농민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광주 기아차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중 우선 쌀을 구례농민회에서 직거래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모심기, 상호초청행사 등을 통해 서로 호혜적인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신뢰의 기반위에서 상호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 금속연맹 같은 경우에는 임단협시 사내급식에 사용하는 식자재를 지역농산물을 직거래로 이용하는 것을 공동요구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역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것을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일반 유통시장을 통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과 협력해 직거래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역시 보건의료노조에서 중앙 임단협 요구사항에 지역의 유기농 쌀을 환자식에 사용하는 것을 올해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급식 역시 중요한 영역이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우선 실시할 수 있는 곳이다.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역농민들이 서로 필요성을 공유하고 준비만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킬 수 있는 영역이 공공기관 급식이다.

유치원, 학교, 병원,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수요를 지역농산물을 직거래로 이용하고 이를 위해 준비되는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 구조가 마련이 된다면 이러한 사회적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이 지역농산물을 신뢰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런던은 아예 시장 직속기구로 ‘런던푸드’라는 기구를 만들어 로컬푸드(local food) 증진정책을 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시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4.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에서 친환경농업의 확대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농산물직거래는 친환경농산물만을 다루게 되지는 않는다. 친환경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산’ 이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지역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가 가장 좋은 것임에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여전히 가격이라는 장벽 때문에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당장 가능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학교급식만 보더라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지역친환경농산물로 바꾸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역살림먹거리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곳이 사업장이든 병원이든 단체급식에 사용하는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소비주체와 농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에서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의 확대를 통해 형성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살림먹거리 체계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비주체와 농민 상호간의 만남,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럴 경우 일상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생산자는 상호 신뢰의 확대를 위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농사에 사용되는 농약과 비료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여기서 좀더 관계가 진전이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의식공유가 이루어지고 생산자와 소비주체가 서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살림먹거리에서 친환경농업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지역살림먹거리 체계(local food system)가 발달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먹거리에서 차

지하는 친환경농업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5. 먹거리의 공공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차원에서의 농업회생과 식품안전이라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해보자는 것이다. 즉 지금처럼 세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식품체계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작동되는 식품체계의 구축을 통해 세계 식량체계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이 가지는 의미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세계 식량체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간파해 자국의 농업 및 식품정책을 이러한 지역살림먹거리 체계(local food system)로 재편해나가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들을 협동체제로 묶어내는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은 먹거리의 사회적 관리를 그 목표로 해야 한다. 즉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먹거리를 시장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 먹거리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온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었다. 교육이나 의료등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는 일방적으로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공교육체계, 건강보험을 통한 공공의료정책 등을 통해 사회공공성의 관점에서 부족하나마 공식적인 정책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사람의 생존에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농업, 먹거리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인 가치 - 식량안보, 자연생태계 보존, 수자원 보존, 대기정화, 전통문화 계승,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의 공익적인 요소가 경제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생명공공재로서 사회공공성의 관점을 확립하거나 공식적인 정책으로 다루어 진척이 없다. 물론 추곡수매제도(이미 폐지되었지만)나 약간의 직불제라는 형태의 정책개입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 역시 정권의 필요나 농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었지 근본적으로 농업과 먹거리를 시장의 영역이 아닌 사회공공성의 영역으로 다루어 본적은 없다. 이의 필연적인 결과가 작년의 CJ푸드시스템에 의한 학교급식 사고가 아니겠는가. 비단 CJ 급식사고 뿐

만이 아니라 농업과, 먹거리를 이윤만 우선시하는 시장에만 맡겨 놓은 결과가 바로 농업의 붕괴와 끊이지 않는 식품안전사고이다.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것이 안전한 농업과 건강한 농민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인데 농업을 전면적으로 몰락시키고 밥상의 대부분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게 하는 지금과 같은 시장시스템 하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살림먹거리 운동은 먹거리의 사회공공성을 확립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확립해야 하며 지역에서부터 먹거리를 공공영역에 편입시켜 지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㉞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농업기술회보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회보를 위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 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